16일 Market Index
코스피 5100.50 (-190.03)
코스닥 665.65 (-34.01)
금리(국고채 3년) 3.743 (-0.016)
환율(원·달러) 1335.7 (-1.0)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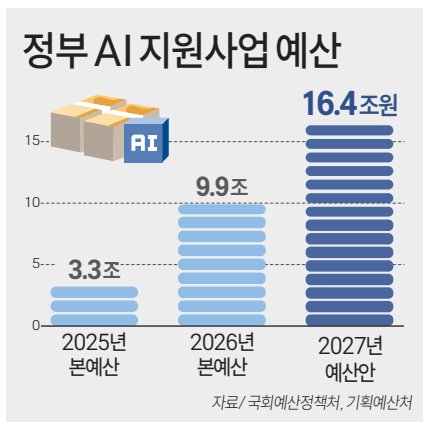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정부서 GPU 확보, 9.9조 투입… AI 고속道 깐다

AI 3강으로 가는 길

❶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연간 10조원 안팎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확보하기로 한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목표 물량의 60%를 확보했고, 독자 AI 모델 개발 사업도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와 정책이 실제 기술 경쟁력과 산업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청와대·국가AI전략위·과기정통부, AI 정책 '3각 추진체계' 가동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축으로 국가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대통령의 AI 정책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범정부 정책을 조율한다. 현재 이해민 수석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초대 AI수석을 지낸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정책 조정을 맡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요 AI 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는 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 AI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AI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연계하고, 주요 사업의 방향과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99개 과제에 예산 3배 늘어… 내년에도 AI분야 증액 기조

정부 AI 정책의 청사진은 올해 2월 확정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2026~2028)'에 담겼다. 행동계획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 아래 99개 실행과제, 326개 정책권고를 제시했다.

정책권고마다 담당 부처와 추진기한을 정해 실행력을 높였고, 이 가운데 266개는 올해 안에 추진하도록 했다. 국가AI전략위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의 문제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수능 등 국가시험 AI 사용 부정행위 사후 조사근거 마련



정부가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응시자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공인 시험이 이미 치러진 뒤에라도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현장 적발이 안 됐더라도 사후 점검·단속을 통해 AI 기기 사용 등 부정 응시자를 추적하고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사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체계 정립에 착수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성숙 총리, 부정행위 방지 회의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 철저히 마련"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수능 관련해서는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우선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험 결과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에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통신부에는 수능시험 시간 모든 시험장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세종=김연세기 자 kys@



수능 문답지 부산 도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학교에서 교육청 관계자 등이 도착한 수능 문답지를 보관장소로 옮기고 있다. 올해 부산지역 수능 응시자는 2만9181명이며, 이들은 오는 19일 64개 고사장에서 시험에 응시한다. /뉴시스

매매보다 전·월세 더 뛰었다… 서울 전세 평균 5억 돌파

부동산원, 올해 서울 전세 7.42%↑
지난해 1.92%의 네배 가까이 올라
월세 7.34% 상승, 전년의 3배 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는 물론 전세와 월세가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매매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를 앞질렀고, 월세는 그보다 더 뛰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가격은 매매 0.65%, 전세 0.68%, 월세 0.77% 올랐다. 전국(매매 0.28%·전세 0.34%·월세 0.40%)과 수도권(0.57%·0.59%·0.66%)에서도 상승률이 월세가 가장 높고, 전세가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지역이나 단지가 나오는 가운데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나타나며 서울·수도권 위주로 올랐다"며 "전·월세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을 보면 임대차 시장의 급등세가 더 뚜렷하다. 서울 주택 전세가격은 올 들어 10월까지 7.42%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92%)의 네 배 가까이 됐다. 월세도 7.34% 올라 지난해(2.21%)의 세 배를 웃돌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9.03%)은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누적 상승률(8.90%)을 이미 넘어섰다.

서울 매매시장은 '북고남저'다. 한강 이북 14개구는 1.04% 올랐지만 이남 11개구는 0.29%에 그쳤다. 서대문구의 상승률이 1.35%로 가장 높았고 ▲노원구(1.34%) ▲성북구(1.29%) ▲광진구(1.29%) ▲동대문구(1.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구는 한 달간 1.24% 하락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0.75%, 0.18% 내렸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올랐다.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은 0.85% 올라 아파트(0.54%)를 웃돌았다. 아파트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536만원, 평균 전세가격은 5억98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세가격이 9월(4억9769만원)보다 크게 오르며 5억원을 넘어섰다. 월세는 평균 보증금 1억4803만원에 월 134만1000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6862만원, 평균 전세가격은 6억4538만원이었다. 월세 아파트는 평균 보증금 1억9581만원에 월 168만1000원을 내야 한다. 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인 중위가격도 서울 아파트 매매 11억500만원, 전세 5억7000만원에 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36.4%…전주 대비 0.5%p↑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안해" /사진 뉴시스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안해"
▲여야, 교육위원회서 'AI 수능커닝' 한목소리 우려
▲국힘, '조작 징계' 내홍 지속…'한동훈 제명' 추가 폭로에 눈길
▲선관위특검, 검사 1명 추가 파견받아…정원에는 여전히 못 미쳐